국감 검증·증인 채택 격돌

“김경준 300억 은닉” “대운하 개발비 충분”

정무위, 한나라 의원 집단 퇴장 ‘반쪽 국감’

국회는 23일 법사, 정무, 국방, 건교위 등 13개 상임위를 열어 소관부처와 산하기관에 대한 7일째 국정감사를 계속했으나, 대선후보 검증 관련 증인채택 문제 등을 둘러싼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의 격돌로 파행을 이어갔다.

대통합민주신당은 다음주 주요 증인과 참고인 출석이 필요한 피감기관의 국감에 대한 증인채택을 늦어도 24일까지 마무리해야 하기때문에 표결을 통해서라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정무, 법사 등 관련 상임위에서의 대치가 계속될 전망이다.

◇**증인 채택 공방·대치**=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BBK 연루 의혹’을 둘러싼 공방으로 국감 첫날부터 파행을 빚고 있는 정무위는 이날 국회에서 공정거래위를 상대로 감사를 벌였으나, 신당과 한나라당 의원들이 증인채택 과정의 정당성 여부를 놓고 또다시 ‘충돌’하면서 정상화에 실패했다.

양당 의원들은 국감 개시가 선언되자마자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상대측에 공세를 퍼부었고, 결국 접점을 찾지 못한 채 한나라당 의원들이 2시간여만에 집단 퇴장하면서 공정위에 대한 국감은 신당과 민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또 다시 ‘반쪽’으로 진행됐다.

전날 감사원에 대한 국감에서 이명박 후보의 ‘도곡동 땅’ 의혹 관련 증인채택 문제를 놓고 ‘욕설파문’으로까지 번졌던 국회 법사위는 이날 부산고법과 고검에 대한 감사 현장에서도 대치했다.

◇**김경준씨 ‘300억 비자금 의혹’ 공방**=국회 통일외교통상위 최 성(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은 이날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의 주미대사관 국정감사에서 “김경준씨 사건 실체를 파악하고 있는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미 연방검찰이 스위스은행 비밀계좌 등에 김경준씨와 에리카 김 등의 명의로 약 300억원의 불법 돈세탁자금이 은닉돼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김씨는 300억원이 자신의 재산이라고 주장하지만 미국 정부는 이를 돈세탁한 불법자금으로 보고 있다”면서 “스위스 은행의 계좌는 누구 이름으로 돼 있느냐. 제3 인물의 은닉자금이 아니냐”고 추궁했다.

최 의원은 질의에서 한나라당 이 후보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거론하거나 김경준씨와 이 후보와의 관계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 후보에게 공격의 초점을 맞춘 것임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권영세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주미대사관에 대한 국정감사인데, 김경준의 은닉재산이 주미대사관 국감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제동을 걸고 나섰다.

권 의원은 또 “미국 국무부가 결정할 문제에 대해 (주미대사관을 상대로)계속 질문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한반도운하 타당성 공방**=건교위의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국감에서는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한반도운하 공약의 타당성을 둘러싼 설전이 벌어졌다.

한나라당 정희수 의원은 “운하를 만들어 놓으면 세계적인 볼거리가 되고 건설과정에서 또 다른 미래 사업영역이 구축되는 동시에 신기술을 개발해 세계로 수출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고, 같은 당 허천 의원은 “골재 채취만으로도 8조3천억원의 재원이 마련되는 만큼 개발비는 충분하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또 수자원공사 태스크포스에서 한반도운하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담은 보고서를 만든 데 대해 “정권 차원의 은밀한 공작”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신당 강창일 의원은 “운하 건설과정에서 채취되는 골재를 판매해 총 사업비의 절반인 8조원을 충당하겠다는 한나라당의 계획은 혹세무민의 허황된 것”이라며 “골재는 운송거리가 30㎞만 넘어도 운송비때문에 경제성이 없는데 외국에 골재를 팔겠다는 것이나 운하가 물류에 기여한다는 전망은 말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23일 국회에서 증인채택 문제로 의사진행 발언을 마친 한나라당 의원들이 오후 국감에 불참한 채 정무위 국감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李 찬성, 鄭 반대…이념대결 구도로

‘파병 연장’ 대선 변수 부상

이라크 자이툰 부대 파병연장 문제가 대선 정국의 핫이슈로 급부상하고 있다. 정부의 파병연장 방침에 대해 원내 제1당인 대통합민주신당의 정동영 후보가 반대 입장을 밝힌 가운데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23일 찬성 입장을 표명하면서 주요 대선 후보의 입장이 명백히 엇갈리게 된 것이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이 23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파병연장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당부한 상황에서 신당이 반대 입장을, 야당이 찬성 입장을 정리하는 엇박자가 전개되면서 대선에서 이념대결 구도가 재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이라크 주둔 자이툰 부대 철군 문제와 관련, “지난해 약속한 완전 철군의 시한을 내년 말까지 한번 더 연장해달라는 안을 국회에 제출하려고 한다”며 자이툰 부대 병력을 절반으로 감축하고, 나머지 병력의 파병 기간을 연장하는 제안을 발표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TV 생중계로 진행된 ‘자이툰 부대 임무종결 시기와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대국민담화를 통해 “모든 면을 심사숙고해서 단계적 철군이라는 새로운 제안을 국민 여러분께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는 이날 강재섭 대표, 안상수 원내대표, 이한구 정책위 의장 등 당 고위관계자들과 긴급회의를 갖고 “파병연장 동의안에 한나라당이 찬성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나경원 대변인이 발표했다.

이 후보는 회의에서 “미국뿐 아니라 이라크 정부가 한국군 주둔을 원하고 있으며 파병연장은 자원외교 및 경제협력이라는 국익에도 부합한다”면서 “또 현재 한국군이 주둔하는 지역은 가장 안전한 지역”이라는 세가지 이유로 찬성 입장을 밝혔다고 나 대변인은 덧붙였다.

그러나 신당의 정 후보는 22일 손학규 전 경기지사, 이해찬 전 총리, 김근태 상임고문, 오충일 대표 등 선대위 공동위원장 내정자들과 회동을 갖고 “지난해 국회는 파병을 1년만 연장하기로 국민과 약속했으므로 자이툰 부대는 철군해야 한다”며 “철군문제에 당이 일사불란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한다”는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자이툰 부대 파병연장은 노 대통령이 지난 9월 호주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조지 부시 대통령의 요청을 받아 협조를 약속한 임기말 한·미 관계의 최대 현안이라는 점에서 정 후보의 이 같은 입장 결정은 대선구도를 친미대 반미 구도로 만들겠다는 의도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 이 후보와의 대치전선을 분명히 하면서 전통적 지지층을 결집시키겠다는 계산이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선 후보 가운데 민주당 이인제 후보와 국민중심당 심대평 후보는 ‘정부가 국익을 고려해 고심끝에 내린 결정’이라며 찬성입장을,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와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는 “원칙을 저버린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1천만원짜리 이명박 후보 부인 가방 송영길의원 사진 공개

23일 오전 경기도 수원 중부지방국세청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6개 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 부인의 명품가방 사진이 공개〈사진〉돼 눈길을 끌었다.

대통합민주신당 송영길 의원은 이 후보의 건강보험료 문제를 거론하던 중 이 후보 부인의 것이라며 하늘색 에르메스 가방 사진을 이 후보 부부의 사진과 함께 들어보였다.

사진에는 가방의 가격인 듯 하단에 ‘₩10,800,000’이라고 쓰여 있었으며, 송 의원은 “고가의 가방을 살 정도의 소득과 소비를 하는 사람이 1만5천원의 건강보험료를 냈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 의원은 “이 후보의 신고된 재산만 117억원이고 저는 2억원인데 이 후보는 1만5천원을, 저는 7만~8만원을 낸다”고 비꼬았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안택수 의원은 “건강보험료 문제를 이 자리에서 거론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정치 공세로 한심하고 이명박 후보 흠집내기일 뿐”이라고 송 의원을 반격했다. /연합뉴스

3불정책 유지…기회균등 선발제 전면 확대

문국현 후보 교육정책 간담회

창조한국당(가칭) 창당을 준비중인 문국현 후보는 23일 빈부, 지역 등 출신배경에 관계 없이 학생을 골고루 선발하는 ‘기회균등선발제’를 전면 확대 시행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이날 오전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가진 교육정책 간담회에서 이같이 발표하고 “지방대학 발전 특별법을 제정해 세계 수준의 특성화된 지방대학을 육성해 지역 우수인재가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현상을 해소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현행 대입 3불 정책(기여입학, 본고사, 고교등급제 불허)은 유지하되 국가 표준 학력검사를 통해 학교 평가를 실시, 상대적으로 수준이 떨어지는 학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교육의 상향 평준화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초중고교 교육과정과 교과 내용, 학년제 운영, 교사 자격 등에 관한 국가 규제를 전면 완화해 다양한 학교를 설립.운영할 수 있게 하고 교원 임용고시를 폐지해 사범대·교대를 교육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또 예체능 교육 활성화를 위해 전국 지자체마다 예술 교육을 담당하는 기구인 콩세르바투아(Conservatoire)를 설립해 학교는 기본과정 예능교육을, 구·시립 콩세르바투아는 중·고급 예능교육을 실시토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국어, 국사 교육 강화 및 영어 조기교육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외국에서는 6~10살에 제2, 제3 외국어 교육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1시간씩 영어교육을 하는데 그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